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보상에 관한 연구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eachers' Awareness of School Safety Accidents
and Its Compensation : Focusing on Gyeongbuk Region)

김응삼* **
Eungsam, Kim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보상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바람직한 피해보상 제도를 모색하는데 있다. 그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사고는 시간적으로는 휴식시간에 장소로는 복도와 계단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고처리나 피해보상의 주체는 담당교사나 담임이었고 이는 해당 교사에게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었으며 학교 측에도 불필요한 민원을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책임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교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원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안전공제회 이용에 관한 교육과 홍보, 보상절차의 간소화 및 보상범위의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문색인어 : 학교안전교육,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인식,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대구대학교 대학원 보험금융학과(보험전공), 청하중학교 교사

I. 서론

교육의 목표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지혜롭고 진취적인 사람을 기르는데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학습 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장소이며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공동생활의 공간기능을 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에 보장되어 있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는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의 성장발달과정과 교육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학생과 교사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에 종사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통계자료¹⁾에 의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다양해질수록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의 증가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며, 나아가 사고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교사의 권위 실추 및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교육 활동마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원인은 교육과정 내면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은 정적 교육과정에서 동적 교육과정²⁾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사회적 기대인식의 변화³⁾를 꼽을 수 있다. 학교의 의무가 가르치고 배우는 전통적 기능인 교육의무 외에 부모의 역할로서 잘 키우고, 보살피는 양육의무까지 확대 된 것이 그 예이다.

1)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기타학교 포함)의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09년 53,221건에서 2010년에는 56,42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체험·현장·노작·실험·실습 등 학습자 스스로의 실질적 체험을 중요시 하는 교육과정으로 학교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이전에는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학생 자신 혹은 학생간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교사에 까지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 원인으로서는 학생자신의 성장단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의 유발자이자 피해자인 초·중등학생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인지발달 능력이 부족하여 주의집중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더군다나 학교는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미성숙한 학생들이 평균 30명 이상 모여 활동하는 곳이며 교사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항상 통제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 혹은 학생간의 역할 수행 등으로 인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정상적인 교과 교육활동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하여 상해문제가 발생하면 학부모는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물어 법정까지 가는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실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의 책임자인 교사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교사는 이러한 순환 과정에서 학습된 학교안전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잠재적으로 교육활동⁴⁾의 위축을 받게 되며, 교육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암시적 제약⁵⁾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학교안전사고는 단순히 피해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게는 교실, 크게는 학교와 교육현실의 문제까지 야기하는 고질적인 문제⁶⁾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담임교사와 학교장은 그 책임성 때문에 교육의 활력소인 체험활동과 야외수업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교사들은 소극적인 자세로 교실 내적인 수업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인원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의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사가 받는 암시적 제약은 곧 학생이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6)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 담임교사의 안전 배려 의무위반으로 나타난 책임문제, 학교장의 감독 책임문제 등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현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단순히 물질적 피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까지 합치면 그 손실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교사들의 수업 운영은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학습자 중심의 적극적인 사고와 수월성 제고, 창의성 수업 전환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수업을 하려면 학교장의 경영철학과 교사의 수업 운영이 현장체험 등과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학교안전사고⁷⁾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논의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교사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범정보호자와 같은 책임을 추궁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정당한 보상체제가 아닌 실비보상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피해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받지 않고 민사손해배상 책임 쪽으로 선회하여 가해 학부모와 관할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향이 많다. 이와 같이 피해 학부모측에서 소송을 해 올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그 기능은 마비되고 참고인 또는 피고인 자격으로 담임교사가 법정에서 서게 되는 현실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결국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교장과 담임교사, 교육감 등은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2007년 9월 1일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라고 하지만 정작 현장의 교사들은 이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관심이 많거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 교사들만이 이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교사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교사 자신에게 오는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무조건 학교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는 학교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크던 작던 교사에게 주어지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며, 그 교사는 남은 교직 생활동안 그 사고로 인한 상처를 안고 가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힘들고 끈질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학교안전사고는 해마다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7)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감해져야 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사고의 처리 방법, 법적책임⁸⁾ 등에 대한 전문지식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교사에게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체계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오늘날 교직원(교육활동자⁹⁾ 포함)은 학생의 학교안전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의 안전미비는 학생과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국가는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학교안전사고의 구체적인 방안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장이나 교원이 아무리 주의를 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하여도 미성숙한 학생들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모두 예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과 더불어 보호·감독 의무자인 교직원¹⁰⁾에 대한 구제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원과 학생, 나아가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학교안전사고의 주요 발생 요인과 학교안전사고의 실태를 분석하고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적극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안전사고 경험과 처리, 교원의 법적책임과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바람직한 피해보상 제도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III장에서는 자료수집과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IV장에서는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V장에서는 주요한 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제언, 그리고 연구의 한계에 관해서 논의한다.

8) 교원의 법적 지위에 따라 교육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에 있어서 사립학교 교원은 민법에 의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국·공립학교 교원은 민법 또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9)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II. 선행연구와 연구의 필요성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책임과 보상에 관한 연구에는 김태완(2003), 이병철(2003), 구현자(2005), 김영희(2006), 김숙향(2008) 등이 있다. 먼저 김숙향(2008)은 사립학교의 경우 국·공립학교와 달리 경미한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면할 수 없으니 교권확립을 위해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사법적 판단에 대하여 교육적 입장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의 공적구제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법제도적 보완이 상호 절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복지차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지원금을 늘려서 보상의 종류와 지급범위를 확대하여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교원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영희(2006)는 교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의 전직·현직 교육과정에서 일정 시간의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고, 학교¹¹⁾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매우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무과실책임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교육이 갖는 국가적 책무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학교안전공제회와 같은 상호부조적인 공제제도가 아닌 사회적 보상체계의 공적보상이 이루어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태완(2003)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과 교권과의 관계 고찰’에서 학교안전사고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체육시간과 휴식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학생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가장 빈번한 점을 들었다. 언제나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보상비 지급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질병치료에 대한 부담이 나날이 증가하여,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물론 신분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피해보상¹²⁾에 대한 구상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12)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권 행사로 교원의 생계에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교원의 책임 범위를 너무나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교권침해의 소지가 많음을 지적하고 학교안전사고에서의 교권침해방지 방안을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위한 방안, 제도·운영상의 개선방안, 교육적 대처방안의 범주별로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구현자(2005)의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와 교사 인식 분석'에서 나타난 학교안전사고 경험과 처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사고발생 시 처리상황에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상대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교사들은 학생 친권자의 대리 감독자로서 주의의무 이행과 학생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 활동 시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학부모,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 교육의 체별로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교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경과실의 경우에는 학교측이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철(2003)은 '학교안전사고의 보상제도와 법적 책임에 관한 초등교사의 인식 연구'를 통해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의 안전사고 실태와 안전공제회의 인식실태, 현직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안전사고가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 한계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경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는 면책특권 등의 보완 조치를 통해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

- 헌법 제29조 제1항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민법의 조항 중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불법행위의 내용을 언급한 민법 제750조, 위자료에 대한 제752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을 이야기한 제753조, 그 밖에 제754조, 제755조, 제756조, 제761조 등이 있다.
- 국가배상법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기본권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51년도에 제정되었다.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만 규정한데 비하여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책임(제2조 제1항 전단), 자동차사고 책임(제2조 제1항 후단), 공공의 영조물의 하자책임(제5조 제1항 전단)에 관하여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사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전공제회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공제회의 자세한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겪는 교사의 인권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호하는 법적 체제의 완비를 위해 지속적인 국가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안전사고에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에는 박봉훈(2006)과 박현근(2007)이 대표적인데, 박봉훈(2006)은 강원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상 제한적 보상공제를 문제점으로 들었다.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의 교사의 감독의무자로서의 책임유무로 인한 소송, 불충분한 성형치료, 치료부대비용의 미보상, 정신적 피해의 불인정을 문제점으로 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재정 확충, 학교안전공제회 전문 인력의 확보, 학교안전공제회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 강화를 들면서 나아가 학교안전사고발생의 사후대책으로서 보상공제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서 학교급별 안전사고 발생실태, 유형별 분석결과, 원인별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것이 바로 피교육자인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교 및 교사와 보호자 사이의 신뢰관계도 새롭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학교안전사고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속도가 빠른 시기에 집단적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므로 보호자와 학교 및 교사 사이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엇보다 신뢰관계의 형성을 강조하였다.

박현근(2007)도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학교안전사고(유형13) 포함)에 대한 특성과 문제점을 먼저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논의되고 있는 학교안

- 13)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고와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고로 구별되는데, 구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시간(등·하교시, 학교 일과가 시작되기 전, 수업시간, 휴식시간, 청소시간, 자율학습시간, 방과 후), 장소(실험실 등의 교실 내, 운동장 등의 교실 밖, 학교 울타리 밖의 교외), 피해내용(신체적 피해, 명예훼손, 재산피해), 사고원인의 주체(사람, 시설), 사고형태(학생과 교사간의, 학생간의, 학생 자신에 의한)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질병과 폐질도 학교의 관리하에서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포함시키는데, 질병이란 학교급식에서 기인하는 중독이나 조리실습 중 또는 기타 중독, 일사병을 의미하며, 폐질이란 두 눈의 실명, 언어 기능의 상실에서 손가락의 절단에 이르기까지의 부상·질병의 후유증까지 포함된다.

전사고에 대한 관련법 제정의 방향도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선행연구물은 거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분석, 교사의 책임 내지는 교권과의 관계, 실태 분석을 통한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 중 본 연구의 방향에 도움이 된 연구물의 내용은 결국 예방교육의 강화, 교사의 인권과 재산의 피해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의 완비, 사회적 보상체계의 공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결론에서 나타내었다. 학교안전사고의 불안을 안고 생활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강화는 당연한 일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새로 제정되었으니,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 침해와 법적책임의 유무 문제가 남아있는데 살펴보면 이 또한 결국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다. 비슷한 주제의 앞선 연구들이 있지만 이 모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연구들이고 이 연구들에서 주장하였던 보상제도의 문제점들이 실제 새 법률에서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법 시행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안전사고 보상 및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을 연구의 범위와 자료, 조사 도구, 자료의 처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범위와 자료

학교안전사고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과정 인식도(학교안전공제회 이용 경험 유무 등으로 구성)를 조사한 후 학교의 설립 형태별, 학교급별, 성별, 직위별, 교직 경력별, 학급 규모별, 학교 급지별(위치별)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 하였다.

자료는 경상북도 일원(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지역)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들이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는 설립 형태별, 학교급별, 성별, 직위별, 교직 경력별, 학급 규모별, 학교 급지별(위치별)로 대상을 고려하여 임의로 표집 하였다. 설문지는 320부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포하여, 30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통계에 사용할 수 없는 부실 응답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최종 293부를 최종 자료로 확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분포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대상의 구체적 분포>

	구분	인원	비율(%)	전체
설립 형태별	국·공립	157	53.6	293(100.0)
	사립	136	46.4	
학교급별	초	60	20.5	293(100.0)
	중	117	39.9	
	고	116	39.6	
성별	남자	160	54.6	293(100.0)
	여자	133	45.4	
직위별	부장교사이상	99	33.8	293(100.0)
	평교사	194	66.2	
교직 경력별	10년이하	64	21.8	293(100.0)
	11년-20년이하	85	29.0	
	21년이상	144	49.1	
학급 규모별	1-11학급	78	26.6	293(100.0)
	12-17학급	50	17.1	
	18학급이상	165	56.3	
학교 급지별 (위치별)	시단위	153	52.2	293(100.0)
	읍단위	98	33.4	
	면단위	42	14.3	

2. 조사 도구

교원들의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경험 및 처리의 인식, 학교안전시설관리 및 교사의 법적책임에 대한 인식,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과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과정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해 윤건치(1991), 고

영택(1991), 정일용(1989), 박주영(1995), 김종택(1997) 등의 연구를 분석하여 구현자(2005)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자구 수정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경향에 관한 설문지(총 30문항)의 구성을 보면 학교안전사고의 경험과 처리 인식도 13문항, 학교안전시설관리 및 교원의 법적 책임 인식도 7문항,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과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과정 인식도 10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하위변인 및 문항의 배열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경향에 관한 설문지 문항>

구분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학교 안전사고의 경험과 처리 인식도	- 학교안전사고 경험 유무	1, 2	2	
	- 학교안전사고 곤란(피해) 유형	3, 4	2	
	- 학교안전사고 발생 유형	5	1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기	6	1	
	- 학교안전사고 발생 장소	7	1	
	- 학교안전사고 처리 방법 및 과정 인식	8, 9	2	
	- 학교안전사고 발생 원인	10	1	
	- 학교안전교육과 관련 교과	11	1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과 교육활동	12	1	
	- 교과 교육과정 운영 중 가장 우려되는 활동	13	1	
	학교안전시설 관리 및 교원의 법적책임 인식도	- 학교안전시설관리 정기적 안전 점검 유무	14	1
		- 학교안전시설관리 이용 안내문 게시(위험 표지판)	15	1
		- 학교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의 행정적 지원	16	1
-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 법적 책임		17	1	
- 고의나 과실일 때 법적 책임		18	1	
- 정규 교과 교육활동 이외의 안전사고 책임		19	1	
- 체벌이 원인이 된 경우의 책임		20	1	
학교안전 공제회 보상과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과정 인식도	- 학교안전공제회 이용 경험 유무	21	1	
	- 학교안전공제회 이용시 불편한 점	22, 23	2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의 필요성	24	1	
	-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해결의 주체	25	1	
	- 학교안전사고 대비 교사 보험금 부담	26	1	
	- 학교안전사고 대비 교사 보험금 가입 규모	27	1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및 업무상태	28	1		
-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	29	1		
- 학교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교육 역할 분담	30	1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안전사고 보상 및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일원(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지역)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들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검증은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보상에 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원들의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사고경험 및 사고처리의 인식에 관해서는 학교안전사고 경험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학교안전사고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안전사고 유경험자는 주로 2차례 이상의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곤란 유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교원들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곤란을 겪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곤란을 겪은 유형으로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곤란을 겪지 않은 이유는 사소한 사고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발생유형과 시기 그리고 장소와 원인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유형은 교육활동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사고 발생 시기는 주로 휴식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생장소로는 복도/계단이 많았고, 다음으로 교실, 급식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원인은 본인의 과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안전사고 처리 방법 및 과정 인식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처리방법은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처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처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피해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교육과 관련이 있는 교과로는 예·체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과 교육활동에 관해서는 교육활동 전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규교과 교육과정 운영 중 가장 우려되는 활동으로는 체육활동과 현장체험학습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원들의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학교안전시설관리 및 교사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시설관리의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안전시설관리 이용 안내문 게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부분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의 행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위험요소 건의 시 즉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원들의 법적책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교사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교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교사에게 도덕적, 행정적 책임을 묻되 사고의 보상은 관련 교사와 학교가 적절히 분담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교과 교육활동 이외의 사고에 대한 책임부분에서는 학교와 담임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담임교사는 책임이 없고 학교 측과 학생 측이 서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벌이 원인이 된 경우의 책임에서는 해당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교사가 책임을 지고, 가벼운 과실은 학교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사 일방의 책임을 묻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원들의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처리 이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이용한 적이 없거나, 1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시 불편한 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편했다라는 의견도 30%이상으로 나타나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편한 점으로는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교원단체 보험제도 운영으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맡아서 처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해결의 주체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 대비 교사의 보험과 관련한 보험가입 규모는 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가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처리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제도적 보완과 보상범위 확대 적용을 통한 교사 권익 보호와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 학교안전사고처리위원회 조직 및 사고처리를 위임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사전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공단, 안전협회 등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보상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교안전사고 처리나 피해보상의 주체가 담당교사이고 이에 대한 교사의 법적책임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보상처리도 교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교안전공제회의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온다는 것은 결국 교육과정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따라서 책임의 소재는 상급교육기관과 학교가 우선적으로 지고, 교원은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휴식시간, 복도, 계단에서의 사고가 많은데 이것은 학교의 환경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즉 계단의 경사면, 모서리 부분 등에 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고, 복도 또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고처리 과정에서 담당 교원이 직접적으로 사고를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학교안전공제회나 학교 차원에서 사고처리 과정을 맡아서 하고, 교원은 도의적으로 피해학생 및 학부모와의 원만한 관계형성 개선을 위한 상담활동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안전교육은 수시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예·체능 시간과 현장 체험학습 전에 주기적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사전예방교육을 위해 안전관리공단, 안전협회 등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안전시설 보수와 관련하여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안내문 등을 곳곳에 게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원들의 법적책임은 교원이 직접적인 과실(과도한 체벌, 의도적 상해 등)을 제외하고는 교원의 법적책임은 묻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안전사고는 대부분이 교과 활동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교원의 법적책임은 자칫 교원의 교과교육활동까지도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스웨덴처럼 교육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쉽게 (사)학교안전공제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보상범위를 확대 적용 및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사)학교안전공제회가 모든 것을 맡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일반 사보험 회사들처럼 교원들이 직접적인 보상처리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가 이러한 유의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에도 초보적인 실태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가령 교사들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분석은 민속학적(Ethnography) 연구방법이 유효하지만 이와 같은 정성적 연구방법을 도입하

지 않고 설문지법에만 의존하였기에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연구대상이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경상북도일원의 학교로 제한하고 있고, 사고 범위도 교육활동 이외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 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구현자(2005).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와 교사 인식 분석.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숙향(2008). 학교안전 사고보상 제도탐색.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2006).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책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익삼(2012). 언론기사를 통한 학교안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길(2009). 학교 안전 사고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의제설정 과정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욱(2011).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의 민사책임에 관한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완(200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과 교권과의 관계 고찰.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달호(200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봉훈(2006). 학교안전사고 보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 강원학교 안전공제회 보상실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근(2007).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조사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철(2003). 학교안전사고의 보상제도와 법적 책임에 관한 초등교사의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란(2010). 학교안전사고 판례에 나타난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학교안전사고 판례에 나타난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재석(2012). 학교안전사고 판례분석 : 대법원판례와 교원 소청 심사 결정례를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미자(2010).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연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성래(2007).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과 교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eachers' recognition and the compensation scheme on school safety accidents. The main result is as following. First, school safety accidents is inclined to occur a lot on the stairs and aisles in off hours. Second, a homeroom teacher is a person who mostly take charge of settlement of an affair including to negotiating compensation problem teacher. Third, the teachers' regal liability for school safety accidents is not clearly defined problems and this causes that adjusting claims are treated variously by different teachers. Lastly, the most of teachers does not use Korea Education Safety Mutual Association(KESMA), but their private insurance as dealing with school safety accidents. Thus I conclude that KESMA need to realize and promote more its insurance cover.

※ Key words : InSchool safety education, Compensa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Teachers' awareness of school safety accidents, Compensation of the Korea Education Safety Mutual Association